

한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색

-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글로벌, 지역협력'으로 -

전진호*

jeon@kw.ac.kr

Contents

- I. 서론
- II. 한일 안보협력의 과거와 현재: '냉전형 안보협력'
 - 2.1. 냉전형 안보협력의 전개 및 현황
 - 2.2. 냉전형 안보협력의 문제 및 발전방향
- III. 새로운 한일 안보협력의 모색: 글로벌, 지역협력
 - 3.1.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 3.2. 대테러 국제협력과 한일 협력
 - 3.3. 해양에서의 협력
 - 3.4. 재해 및 재난, 환경 분야의 협력
- IV. 결론

Abstract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dramatically promoted since 1990s, but left a variety of options to pull them together. Korea stages joint maritime drills with Japan, but the drills are just disaster-relief training for peace purpose, which have not reached the level of substantive military cooperation. This is mainly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national issues of each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raise military exchange to military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should expand collaborators into new areas, completing preliminary environmental preparations such as building trus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ettling down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At this point, Korea-Japan cooperation on the 21st century have to be led towards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First, with the existing cooperations and military exchanges they have worked together on discussions, Korea and Japan

* 광운대학교 교수, 일본 정치외교 전공.

본고는 2008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should seek for th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view of longer-term and preventive diplomacy. In particular, they need to look for measures for active cooperations of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Second, it should be linked to fur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not just becoming mere the due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urthermore, it is needed to collaborate in the direction of seriously considering of preparing prevention of threats and uncertainty, not to mention resolving threats. Over the cooperation on existing threats, Korea-Japan cooperation like combined defence of sea transportation route is directly connected to security guarantees in the future.

Key Words : 日韓安保協力、非傳統的安保協力、平和維持活動、國際安保協力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Peace Keeping Op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I. 서론

탈냉전과 9.11 테러는 국제안보환경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은 기존의 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냉전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미일동맹의 경우, 일본과 일본 주변의 유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동맹에서 미국의 국제안보전략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유사에 대응하기 위한 주둔군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기동군적 성격으로 변환되고 있다. 즉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과거와 다름없는 지역군으로서의 성격에 더해,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대테러전쟁,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일은 3국간의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에 있어 한·미·일은 공동의 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관계를 보면, 양국은 노무현-고이즈미(小泉)정권기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21세기 한일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은 1998년에 발표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 위에 있지만, 여전히 양국은 명확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나 FTA 협상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은 일부 진전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어떠한 미래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양국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양국의 협력관계 중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안보분야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에 한국이 일본으로 최초의 무관을 파견한 이래 국방장관의 상호방문, 군사당국간 긴급연락체계의 구축,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훈련에 이르기까지 한일은 지난 40여년 이상 군사·안보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군사 당국의 상호협력은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나 외교관계에서의 대립을 넘어선 협력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냉전기간 동안 한일은 양국의 안전보장에 중심을 둔 2국간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군사교류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이른 바 ‘냉전형 안보협력’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냉전적 안보협력’이란 개념은 학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1)유엔이나 다자간 협력보다는 2국간 협력중심 (2)군 인사 교류나 군사 정보교환 등의 군사적 협력 중심 (3)비전통적 안보위협보다는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 등이 중심이 되는 안보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새로운 안보분야의 한일협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것은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이다. 그동안 한일 안보협력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해적문제, 해양수송로(SLOC)의 방위 등 해양의 안전보장문제, 지구적 재난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평화유지(PKO)활동, 대테러 협력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한일 안보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한일 안보협력은 ‘냉전형 안보협력’과는 다르게, 글로벌한 그리고 지역 협력적

1) 한일 양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2010년에 1998년의 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 안보협력은 냉전형 안전보장 협력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협력, 지역협력을 전제로 하는 협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을 ‘탈냉전형 안보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형 안보협력’은 (1)2국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적, 글로벌 협력의 지향 (2)직접적인 군사협력 이외의 다방면의 교류, 협력의 증진 (3)전통적 안보협력뿐 아니라, 해양협력, 대테러협력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 40여년 이상 구축해 온 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은 향후도 강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군사교류나 합동훈련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이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각각 해군과 해상자위대를 파견한 것처럼 해상에서의 안보협력 문제가 중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해 있으며, 또한 한일 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의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은 기존의 한일 안보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일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군사동맹과 유사한 차원의 군사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동 군사훈련 등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보다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은 협력의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하는 협력분야이다. 전통적 분야의 한일 안보협력이 한층 더 높은 단계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협력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을 모색하고, 한일 협력이 2국간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및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안보협력 논의가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미래의 한일 안보협력은 비군사적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협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는 2국간 협력 중심의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글로벌, 지역협력 중심의 안보협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점을 아울러 분석한다.

II. 한일 안보협력의 과거와 현재: '냉전형 안보협력'

1960년대 이래의 한일 안보협력은 양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2국간 안보협력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전보장의 기본 틀로 하여, 일본과의 2국간 협력을 추가로 유지해 왔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즉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보조적 장치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일의 냉전형 안보협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양국이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냉전형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존재가 전제된, 미국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안보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냉전형 안보협력의 전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본다.

2.1. 냉전형 안보협력의 전개 및 현황

한일 간의 군사교류는 1966년 한국이 일본으로 무관을 파견하고, 그 이듬해 일본이 한국으로 무관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송화섭 2007, p.46). 그 이후 1980년대에 한일 간의 군사교류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실질적인 안보협력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까지의 한일 안보협력은 주로 군 인사 및 군사정보 교류 수준의 낮은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학술교류, 국방예산 및 무기정보 교류, 상호 군사참관 등의 다양한 분야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확대되었다.

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군 인사 및 군사 교류²⁾를 보면, 한국의 군 수뇌급 인사의 일본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1969년의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의

2) 서동만은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군사협력, 안보대화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군사협력을 군사교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서동만 2006, pp.144-145). 한일 군사협력의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송영선 1999, 이상우 1999 참조.

방일(訪日)에서부터이다. 그 후 1971년에 국방차관의 방일, 1973년에 해군총장과 공군총장의 방일이 성사되었다. 한편 일본 군 인사는 1968년의 통합막료회의의장(통막의장,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 해당)의 방한(訪韓)을 시작으로, 1969년에 육상자위대의 막료장³⁾, 1970년에는 방위청 차관이 각각 방한하였다.⁴⁾ 일본의 방위청장관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79년이었으며,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1994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p.21). 따라서 군 인사 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9년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의 방한에 이은 방위청 장관의 방한에 의해 본격화되어, 같은 해 최초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당시 일본은 해군 훈련함 상호방문 등의 안보협력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1983년 한국이 해군 훈련함 상호교환을 제의하여 같은 해 일본 사관생도가 한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군 고위인사 및 실무자의 상호 방문, 군사교육 교류, 함대의 상호방문 등이 추진되었고, 장교의 상호 교육 기관 파견이 본격화 되었다. 1995년에 한일은 「군용기 우발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공군간의 긴급연락체계(핫-라인)를, 1999년에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간에 핫-라인⁵⁾을 설치하여 군사협력이 본격화 되었다(고대원 1995, pp.123-124). 한일 군사교류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일 군사교류의 현황

유형	의의	성과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교류	쌍방의 중요한 관심사항인 지역정세, 국방정책 등에 관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신뢰, 협력관계의 강화 증진을 도모하고, 차후의 교류 강화에 기여	- 1994년 이후 양국 장관이 매년 교대로 방문회담 실시 - 2005년 1월 해군참모총장 방일, 2005년 2월 합참의장 방일, 2005년 7월 육막장의 방한 등 차관, 합참의장, 육해공 각 군 참모총장급 대화 및 상호 방문 실시
국방 당국자간 정기	국방정책의 기획 입안자간의 지속적인 직접 의견교환을 통해 고위급 대화, 교	- 1994년 이후 매년 국방급 국방정책실무회의 실시, 1998년 이후 외무당국을 포함한

- 3)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막료장은 우리나라의 각 군 참모총장에 해당.
- 4) 방위청은 1954년 총리부 직속의 내청으로 출범하였으며, 창설 53년만인 2007년 방위성으로 승격하였다.
- 5) 한국 국방부의 정책기획국장과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사이에 개통.

협의 등	류의 기초가 되며, 당사국과의 상호신뢰관계 강화에 기여	안전보장대화 실시 - 합참-통막간, 육해공 각 군간의 대화 실시
부대간 교류	공동훈련 및 교류행사 등을 통해 상호 신뢰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	- 인적교류, 훈련합대 등 합정, 항공기 상호 방문, 수색구조 등의 공동훈련 - 육군은 2001년 이후 육군 제2군사령부와 서부방면대 간의 상호 방문 - 해군은 1994년 이후 합정 상호 방문, 1999년 이후 수색구조공동훈련 실시 - 공군은 2000년 이후 항공기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 실시
유학생 교류	교육 목적 이외에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며, 인적 교류를 통해 상대국가의 방위정책과 부대 실태 등에 대한 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에 기여	- 유학생 수용 및 군 관련기관에 대한 유학생 파견 - 국방대 및 각 군 대학에 유학생 교환
연구 교류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실시하여, 상호이해 촉진과 더불어 교류 유지·심화에 기여	- 연구기관간의 연구교류 - 국방연구원 및 국방대학이 방위연구소와 정기적인 연구교류 실시

(출전: 송화섭 2007, p.51)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급진전된 계기 중의 하나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小淵)회담에 의한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선언에 첨부된 「행동계획」에서 양국은 정례적인 안전보장대화 및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국방 당국 간의 교류확대 및 긴급 연락체계의 구축, 군 수뇌부 및 실무자, 합정의 상호방문과 상호 위탁교육의 실시 등을 합의하였다.⁶⁾ 또한 1998년 10월에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한 단계 높은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에는 양국 간의 「긴급시 연락체계의 구축», 「수색, 구조에 관한 해상공동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⁷⁾ 특히 1999년 8월에 제주도와 큐슈(九州)사이의 해협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은 수색 및 구조훈련이었지만, 한일 양국이 실시한 최초의 공동훈련이었다.⁸⁾ 이 훈련에서 한일 양국은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란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위대와의 공동훈련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헌법적 논란

6) 한일 공동선언의 ‘행동계획’과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이원덕 2002, pp.116-127 참고.
 7) 한일 간의 해상공동훈련은 해군간 평화목적의 수색 및 구조훈련을 통하여 양국 해군간 교류 증진 및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한국에서는 구축함 1척과 호위함 1척, P-3C 1대, 함재 헬기 1대가, 일본에서는 구축함 3척과 P-3C 1대, 함재 헬기 4대가 참가함(이원덕 2002, p.122).

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함이었다(서동만 2006, p.150). 훈련 참가를 전후하여 양국의 함정은 각각 부산과 사세보(佐世保)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공동훈련은 군사적 훈련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지만,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공동작전 및 장비 운용, 양국 해군 간의 신뢰구축 및 군사훈련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일 간에 행해지고 있는 군사부문의 정례회의는 방공실무회의(1990년 정례화), 국방정책 실무회의(과장급, 1994년 정례화),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1998년 정례화)⁹⁾ 등이 있으며, 1969년부터 각 군별로 정보교류회의¹⁰⁾, 1999년부터 합참-통막회의, 해군 대 해군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p.22). 부대간 교류의 경우를 보면, 육군과 육상자위대는 2001년 이래 육군 2군단과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의 지휘관 상호방문 등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1994년 이래 함정의 상호방문을, 공군과 항공자위대는 2000년 이래 항공기 상호방문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한일은 다양한 다국간 공동 군사훈련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 양국은 1990년 미태평양 함대가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RIMPAC)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인도지원 활동, 재해구조, 비전투원 대피활동 등의 다국간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 서태평양 소해훈련, 다국간 수색 구조훈련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군 당국 간의 신뢰조성 및 상호이해, 협력 기반은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또한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냉전형 안보협력의 문제 및 발전방향

한일 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지리적, 문화적

9) 안보정책협의회는 한일 양국의 외교부, 국방부의 관계 국장 4명씩 참가하는 회담.

10) 정보교류회의는 정보본부, 육·해·공군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로 연 2회 상호방문하며 개최함.

그리고 정치, 경제적 동질성에 더해, 지역협력의 촉진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로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인식 문제 및 영토문제, 양국의 민족주의적 갈등과 대립, 북한문제 및 대중국 정책 등의 많은 장애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표면화되면 군사 및 안보협력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를 보아 왔다. 또한 노무현-고이즈미 정권기와 같이 양국의 리더십이 안보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송화섭 2005, pp.1-3). 즉 한일이 기존의 2국간 협력의 틀을 넘은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점이 냉전형 안보협력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군사교류가 이루어진 1966년 이래 한일 양국의 전통적 안보협력, 특히 군 인사 및 군사정보 등의 교류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특히 1994년 북핵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후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사건,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격침사건¹¹⁾ 등을 계기로 한층 더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한일은 양국 간의 신뢰관계 구축 및 군사적 투명성 확보에 큰 진전을 보였으며, 상호 간의 인식의 공유에도 크게 기여한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시기의 한일 안보협력은 2국간 협력에 국한된 제한적인 협력관계였으며, 미국의 냉전전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일 안보협력은 지역 협력이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탈냉전 이후 한일은 현재까지 구축한 양국 간의 군사교류를 한 단계 격상하여 한일이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며,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시기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냉전형 안보협력 형태의 전통적 안보교류는 그것이 가능한 한계점에 가까이

11)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해군작전사령부와 일본 해상막료방위부, 공군작전사령부와 일본 공중막료방위부 사이에 3개의 긴급연락체제가 구축되었다(서동만 2006, p.149).

12) 한일 간의 군사안보협력에 관한 전략적 인식 공유는 송화섭 2005, p.4, Takesada 1999, pp.123-140 참조.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한일 군사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양국이 국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미중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양국의 안보협력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과, 헌법해석 문제로 인해 자위대의 운용이 자유롭지 못한 일본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초국가적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두도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차원의 안보협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에 더해, 테러, 해양, 환경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의 노력이 양국의 안보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갈 것이다. 1980년대에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군사적인 협력이 가능한 동맹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송화섭 2007, pp.53-54), 현재의 한일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현실성이 약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의 기반 위에, 새로운 영역의 안보협력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일의 협력은 우리가 처한 21세기 안보환경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일 협력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일 안보협력이 양국 간의 2국간 협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한일협력은 2국간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력,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글로벌협력, 지역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구축하는 것만이 기존의 한일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협력에 더해 한·미·일, 한·중·일, 6자회담 수준의 협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수준, 글로벌 안보협력의 수준 등 다양한 형태의 다국간 안보협력으로 한일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의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13) 한일 군사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김태효 2001, pp.125-128, 송화섭·송영선 2002, pp.168-176 참조.

미 6자회담이나 PSI 협력 등 주요 관계국 사이에서 다국간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의 한일협력은 한일 양국 간의 협력에 그치는 협력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 안보협력을 탈냉전의 변화에 걸맞게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국 간의 특수관계 및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 군사, 안보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일원이며, 한일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일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으며, 지역협력, 글로벌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세계 평화 및 지역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Ⅲ. 새로운 한일 안보협력의 모색: 글로벌, 지역협력

21세기에 들어와 안전보장의 개념 및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안보가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안보는 국가정책 상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이해되어 왔다(하영선·남궁곤 2007, p.218). 이러한 안보개념은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를 국가만으로 한정된 근대국가체제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화와 상호의존의 확대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또한 안보의 대상도 국가 외로부터의 안보 위협에서 국가 내부 혹은 지구적인 안보 위협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즉 국가 간의 전쟁뿐 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질병, 빈곤, 종교적 갈등 혹은 해적 등이 안전보장의 주요한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대는 탈냉전 이후의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안보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즉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 해양, 마약, 테러,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국가가 적절히 대처하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대량파괴무기의 수평적 확산, 테러리즘, 마약 및 무기거래, 해적행위, 컴퓨터 범죄 등의 초국가적 안보위협에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청와대 2009, p.6).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대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로 한일은 주로 전통적인 안보협력에 치중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 한일은 다양한 분야로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과 반대로 이를 제한하는 요인 등이 주로 분석되고 있지만¹⁴⁾, 한일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새로운 협력관계, 즉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일 협력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에 의한 안보위협에 더해 (1)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위협 (2)초국가적 안보위협 (3)해양에서의 안보위협과 같은 다자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안보위협 등에 대한 협력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한 한일협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이 전통적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은, 기존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2국간 협력을 넘어선 지역협력, 국제협력을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한일 안보협력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2국간의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지역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일 안보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기존의 한일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이 협력 가능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음의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된다.

14)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서동만 2006, pp.145-150과 이원덕 2002, pp.116-127 참조.

3.1.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한일 양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PKO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부문이 될 것이다. 한국은 1993년에 소말리아 평화유지단에 공병대를 파견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우리 군이 활동하였거나, 혹은 아직 활동 중인 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연인원 1,337명이 참가하였다.¹⁵⁾ 한편 국군이 다국적군의 일부로 참여한 평화유지활동은 총 8개 지역에서 연인원 19,174명이 활동하였다(국방부 2009, p.277). 일본은 1992년 PKO 활동법 제정 이후, 캄보디아 파병을 시작으로 하여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일본은 원활한 PKO 활동을 위해 2006년에는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PKO 활동 등을 자위대의 본래임무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이래 10여 차례의 PKO에 참가하였다.

이렇듯 한일 양국은 수많은 PKO 활동을 하여 왔기 때문에 PKO 활동에서 협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파견대상 지역정보의 교환, 파견자 교육 및 훈련, 구호물자의 공동 수송, 물자협력 등이 협력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평화유지활동은 물론이고, 구호활동이나 치안유지, 선거감시활동 등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며 물자협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일의 공동 PKO 활동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유엔에 의한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일은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으로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었는데, 파병목적이 국제사회의 대테러 연대에 의한 평화정착 및 안정이라고 하더라도, 한일의 협력대상을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활동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의 불필요한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국의 PKO 협력은 원칙적으로 유엔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평화유지활동에 한정된 한일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5) 2008년 현재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지역은 레바논 1개 지역이며, 인도, 파키스탄 등 6개 지역에 옵저버(감시단)을 파견하고 있다(국방부 2009, pp.107-108).

3.2. 대테러 국제협력과 한일 협력

테러에 의한 위협은 국가에 의한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이기보다 그것이 다양한 조직에 의해 부정형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테러 국제협력에 관해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테러에 대한 협력이 합의되었다. 특히 ASEM 테러대책회의는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성립 이래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테러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활동을 지원하여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미 함정에 대한 급유활동을 하였으며, 항공자위대는 미군 물자수송 등의 활동을 담당하였다. 한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였다. 대테러 활동에서 양국은 개별적으로 미국을 지원하여,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현재 협력하고 있는 사안은 없지만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분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테러 지원활동을 위한 지역 정보교환, 지원태세의 상호연락 및 지원 합리화, 공동 지원 활동 등의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대테러 활동의 경험을 양국이 결합시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은 한미일 공조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의 대테러 활동이 미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대테러 협력에 있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앞서 PKO 활동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엔이 주도하거나 결의한 활동에 한일 협력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일의 협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분쟁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협력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국의 분쟁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관여하게 되는 형태의 협력은 우리가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테러 한·미·일 협력의 경우에도, 유엔이 결의한,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에 한정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엔이 주도하는 대테러 협력에 한일 혹은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테러 국제협력을 한일 협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가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부정 액세스에 의한 시스템 파괴, 데이터 복사 및 열람 등의 행위는 국가안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되었고, 따라서 사이버 침투 및 테러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과 교육 등에 있어서도 한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은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해양에서의 협력¹⁶⁾

해양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안보분야는 해적행위나 마약운송 등의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가 있다.

3.3.1.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해적행위 및 마약운송 등)

냉전의 종식 이후 이른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가 증대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해적행위, 해양에서의 테러, 마약 운송, 불법 어로, 해상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한일 양국은 각각 해양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 분야도 향후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먼저 최근 한일 양국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선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함을 파견하였고 양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해적대책 지역협력협정」에 가입하였다. 이는 말라카해협¹⁷⁾ 주변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국이 해적의 동향과 피해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공동순찰과 단속을 통해 항로의 안전을 확보

16) 해양에서의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川村純彦 1999, pp.231-236 참고.

17) 말라카해협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국경에 접해 있고 각국의 영해가 중복되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 및 중국도 이 해협을 석유 등의 수입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3, 한·중·일 원유 수송량의 90% 이상이 통과한다(국방부 2009, p.99).

하지는 취지에서이다.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는 양국군의 주요한 임무가 되어 있으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은 공동 작전의 수행 및 정보교환, 상대국 화물선의 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은 해적 및 해적테러 대처 등의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증진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외교통상부 2008, pp.4-6), 한·중·일 간의 해양협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서의 안보협력은 한일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한·중·일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쉬운 분야이며, 한·미·일·중 4국의 협력체계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상호 충돌하거나,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과 일정한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글로벌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실행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2. 해양수송로(SLOC)의 공동방위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90%, 교역물동량의 30% 이상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데, 말라카해협은 해적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의 하나이다(국방부 2009, p.99).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해적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관련 국가들은 이 지역의 해양안전보장을 위한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¹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2005년 해양 안전보장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해상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2국가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이 지역의 해상 안전보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주로 미군에 의해 해양수송로 방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를 일본방위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해상교통로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인식하여 일본 주변

18) 해양의 안전보장과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라미경 2009 참고.

1천 해리 정도의 해상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등에 대한 방공은 호위함이 실시하나, 상황에 따라 전투기가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해양수송로의 방위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해군의 주요한 역할로서의 해양에서의 국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가 요구되며,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투입될 수 있는 연안함이나 순양함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기도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말라카해협을 통해 대규모의 교역물량을 수송하는 만큼,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퇴치와 함께 말라카해협에서 양국에 이르는 해양수송로의 공동 방위를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의 공동방위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협력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혹은 한·미·일·중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와 관련한 국내적 문제가 없도록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⁹⁾

3.4. 재해 및 재난, 환경 분야의 협력

한일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국군과 자위대의 임무 중 재난, 재해 등에 대한 대응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재해 파견한 이후 군의 재해, 재난 대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력 임계 사고나 어선의 침몰사고 등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적인 재해, 재난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부언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자위대는 다양한 국제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하여 왔다. 1998년 온두라스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긴급원조 활동을 실시한 이후 10여 차례 자위대가 출동하였으며,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진시는 의료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는 지진이나 동남아의 해난사고 등에 출동 한바 있으며, 다양한 국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국 쓰촨성(四川省)지진 당시 피해 구호물자를 수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일이 국제적인 재해, 재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19) SLOC와 관련한 한일 군사협력은 Ogawa 1998, pp.32-33 참조.

모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동 중인 국방정책 실무회의나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재해,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양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의 하나가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한·중·일은 테러리즘 및 황사문제를 포함한 환경협력 등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²⁰⁾ 따라서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한일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황사·해양쓰레기 등 환경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한일 협력은 2국간 협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협력 혹은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한일간 비전통적 안보협력의 모색

협력 대상	협력 내용	고려 사항
유엔 평화유지활동	- 지역정보의 교환, 파견자 교육 및 훈련 구호물자의 공동 수송, 물자협력 - 평화유지활동, 구호활동이나 치안유지 선거감시활동의 협력 등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에 한정
대테러 협력	- 지역 정보교환, 지원태세의 상호연락 및 지원 합리화 - 공동 지원 활동 - 대 사이버테러 활동	- 유엔이 주도하거나 결의 혹은 요청한 분야에 한정 - 한·미·일 협력으로 시작 - 예방적 차원의 활동
해양 협력	- 공동 작전의 수행 및 정보교환, 상대 국 화물선의 보호 -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	- 한·미·일(중) 혹은 한·중·일 협력 의 형태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저촉되 지 않도록 협력
재해, 재난 및 환경 협력	- 기존의 실무회의를 통한 협력의 모색	- 지역협력 혹은 국제협력으로 발전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일협력은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도 있으며,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분야도 있다. 따라서 한일

20) 2001년 11월과 2007년 1월과 11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의제로 논의.

양국은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협력분야를 다자간 협력, 글로벌 협력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진되었지만, 아직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한일 간에 해상 공동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평화목적의 재난 구호훈련이며, 아직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 이는 한일 양국관계 및 양국의 국내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 간의 군사교류를 군사협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구축,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사전의 환경정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대상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 한일이 지향해야 할 안보협력은 한·미·일 혹은 한·중·일 협력 등 지역협력에서 국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한미일 협력이 중심이 되는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군사교류 차원의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 군사협력이 가능한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2국간 협력을 지역협력, 글로벌협력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일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 위주가 된 2국간 협력 중심의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지역협력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한일 협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기존에 한일이 협력해 온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 군사교류에 더해, 예방외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보협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 간의 2국간 협력으로 그치는 협력이 아니라, 향후 지역협력, 국제협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해, 재해나 재난시의 긴급구조 활동이나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퇴치 등의 협력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셋째, 위협의 해소뿐 만이 아니라 위협의 예방,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대원 1995, pp.117-118). 한일 간의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와 같은 협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협력을 넘어서, 미래의 안전보장에도 직결되는 협력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한·미·일 혹은 한·중·일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²¹⁾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비전통적 안전보장 부분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여 각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2년 이래 중국은 아세안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상하이조약기구(SCO)국가들과 해양수색 및 원조, 해적단속, 마약수송의 단속 등에 관한 협력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한·중·일 혹은 한·미·일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한국정부가 21세기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상 중인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일관계에 관해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다양화해 나가는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청와대, 2009, pp.22-24).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모색은 한일 간의 협력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대원(1995) 「탈냉전 이후 한일 안보협력체제의 방향과 제도화 방안」 『전략연구』 제5호, pp.117-124
 국방부(2009) 『2008 국방백서』, pp.99-277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9) 『1999년도 국정감사자료집(VIII): 국방위원회 소관』, pp.21-22

21) 한미일 군사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김태효 2003, pp.36-38 참조, 한국의 다자 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김강녕 1999, pp.234-237 참조.

- 김강녕(1999) 「한국의 대외군사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STRATEGY 21』 6월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234-247
- 김태호(2003)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외교안보연구원, pp.36-38
- _____ (2001) 「21세기 한일 군사관계의 미래상」 『군사세계』 제79권, 21세기군사연구소, pp.125-128
- 서동만(2006) 「한일 안보협력에 관하여」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 아카데미, pp.144-150
- 송영선(1999) 「한일 군사협력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국방과 기술』 12월호, pp.26-35
- 송화섭(2007) 「한국의 대일 군사외교」 『국방정책연구』 제75호, pp.46-54
- _____ (2005) 「한일 안보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동북아 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pp.1-4
- 송화섭·송영선(2002)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에 대응한 중장기 대일 군사외교 전략』 한국국방연구원, pp.168-176
- 외교통상부(2008) 『한·중·일 협력개황』, pp.4-6
- 이상우(1999) 「한일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 연구」 『신아시아』 제6권 제4호, pp.57-97
- 이원덕(2002) 「한일 안보협력의 현황과 과제」 『외교』 제60호, pp.116-127
- 청와대(2009)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pp.6-24
- 하영선·남궁곤(2007)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p.218
- 川村純彦(1999) 「海上における地域協力の可能性と限界」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PHP 研究所、pp.231-236
- Ogawa Akira(1998) 「The Miracle of 1998 and beyond: ROK-Japans Security Co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0, No. 2, pp.32-33
- Takesada Hideshi(1999) 「Korea-Japan Defense Cooperation: Prospects and Issues」 『신아시아』 제6권 제4호, pp.123-140
- 김영희(1999) 「벽 높은 한일 방위협력」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1999. 1. 27.
- 라미경(2009) 「동아시아 안보, 이제는 바다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2009. 4. 8.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